

# 세타2 엔진 결합 은폐 축소의 실상

막강한 경제력과 조직력에 범무탑까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에 품질 문제나 소비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단히 배타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기 일쑤다. 나중에 돌음이 나면 비수가 되어 돌아 올 것이 뻔해도 우선 근시안적으로 허위 변명부터 하고 본다.

지금 현대·기아자동차는 세타2 엔진 결합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전문학적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미국의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까지 현대차 세타2 엔진 리콜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고,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과 대한민국 검찰은 2015년과 2017년 실시한 리콜의 적정성 및 결합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 가래가 아니라 불도저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항상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은 소비자들이나 직원들의 초기 경고를 무시하여 발생한다. 자동차 업계 최초의 내부고발자인 현대차 품질전략팀 김광호 전 부장이 2015년 8월 감사실에 제보한 '품질본부내 관행적인 리콜 은폐 축소 관행 시정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현대·기아차가 오늘 날 이런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 부장의 공익 신고를 접한 현대차는 "상당수는 이미 종결되었거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는데 결국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2016년 10월 10일 현대차는 "미국 엔진 생산 공정의 정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으로 국내 생산 엔진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이정주 칼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

2016년 10월12일 국내에서도 세타2 엔진의 보증기간을 5년/10만km에서 10년/19만km로 연장해 이틀 전의 변명도 거짓이었다는 것과 국내 판매 차량들도 결합이 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해 버렸다. 그리고 마치 현대차 2개 차종과 기아차 3개 차종만 세타2 엔진 결합이 있는 것처럼 5개 차종만 보증을 연장해 주었다.

세타2 엔진 결합은 출력과 연비를 무리하게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세타1 MPI 엔진은 144마력이었다면, 세타2 GDI 엔진은 271마력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대폭 높아졌다. 그러나 관련 주요 부품들의 강도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행 중 엔진이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중대 결합이 발생하자 출력을 2배에 걸쳐 235마력으로 낮추었다.

세타2 엔진에는 부품과 구조가 동일하고 연료분사 방식만 다른 MPI와 GDI 두 종류가 있는데, MPI 엔진은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것도 거짓말로 보이고 조만간 MPI 엔진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미국에서는 쉐타페, 쏘렌토 등 119만대에 대해 2차 리콜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2017년 4월에야 시동 꺼짐을 인정하고 그랜저 등 17만대를 리콜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은 한국보다도

더 늦게 리콜하였다.

2016년 10월에 10년/19만km로 연장해 주었던 엔진 보증을 2019년 10월에는 2011~2019년형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총 13개 차종 52만대의 결합 차량에 대해 다시 평생 거리 무제한 무상 보증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평생 보증을 해 주는 것"이라며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외부의 우려는 평생 보증을 해 준다고 불식되는 것이 아니라, 엔진 주요 부품의 부족한 강성을 높여서 앞으로 더 이상의 엔진정지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불식되는 것이다. 참고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시"라는 말은 미국에서 1998년부터 10년/16만km 무상보증을 해 줄 때 사용한 말인데,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수용 차량들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지 10년/16만km 무상 보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이 결합의 경중에 따라 대처하지 않고, 사회적 관심도의 강도에 따라 움직이는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 결합의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은폐·축소에 혈안이 되어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급한 불만 끄겠다는 생각과, 우선은 거짓말이라도 변명부터 하고 보자는 너무나 잘못된 근시안적인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새로운 부품이나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신차를 출시할 때는 제법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바란다.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는 자동차 회사의 마루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호 김태겸 △예산총괄과 신명석 △예산기준과 이원경 △국토교통예산과 최동일 △조세법령운용과 김만수 △소세세제과 최시영 △자금시장과 이준진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백누리 △인재경영과 차한원 △국제금융과 이재우 △통상조정과 이미희 △개발금융총괄과 문기영 △국무조정실 파견 박진호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전보 △증권등록본부장 김정미 ◇부장 승진 △광주지원장 김승일 △비즈니스지원부장 조영민 ◇부장 전보 △IT서비스부장 정의수 △IT전략부장 류상오 △증권등록업무부장 박선혜 △증권파이낸싱부장 김정민 △인적지원개발부 수석조사역 정운근 △전산센터구축추진단 수

석조사역 김상곤 △청산결재부장 백상태 △주식등록부장 박종진 △IT인프라운영부장 전산센터구축추진단장 유장상 ◇팀장 승진 △청산결재부 청산결재기획팀장 이상용 △리스크관리부 리스크통제팀장 김승현 △비즈니스지원부 선임전산역 손영일 ◇팀장 전보 △안전기획팀장 김진택 △리스크관리부 청렴준법팀장 서명완 △IT서비스부 e-서비스팀장 안호주 △전산센터구축추진단 선임전산역 이상섭 △전산센터구축추진단 선임전산역 박시형 △펀드사무관리부 펀드지원팀장 이남순 △채권등록부 채권등록2팀장 함영대 △청산결재부 금융지표 개선지원 전담반장 배중혁 △채권등록부 채권등록1팀장 김학준 △IT서비스부 국제·펀드서비스팀장 이청우 △글로벌서비스부 글로벌정보관리

팀장 전일우 △해외사업부 ACG총회준비반장 채영진 △비서실 선임비서역 권의진 △경영전략부 경영관리팀장 김상규 △주식등록부 주식등록팀장 손준혁 △증권예탁부 투자상품관리팀장 김병만 △증권등록업무부 증권등록총괄팀장 최흥규 △증권등록업무부 계좌관리팀장 김수진 △IT전략부 IT보안팀장 서승룡 △비즈니스지원부 선임전산역 이수현 △IT서비스부 증권등록서비스팀장 장영민 △경영전략부 성과관리팀장 우종하

**부고** △박동섭씨 별세, 박진홍(한국철도공사 안문홍보처장)씨 부친상 = 28일,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953 상주장례식장(특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054-531-4444

## 사설

### 국민들을 또 절망케 하는 정치권의 의원정수 확대 논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 개혁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부기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확대'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범여권이 공수처설치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수정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당의 선택이 줄어드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정수확대로 이를 돌파하지는 것이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려면 의원정수 확대, 의원특권을 줄여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게 대의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정쟁분단연정과 협치가 자연스러운 정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절대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로 국민 뜻을 다시 물었다고 나섰다.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정서에 따라 '10% 감축'을 당론으로 유지해 이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 통과를 막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가 사라지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과 역풍을 잠재울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문제다. 국민정서상 국회의원의 '제 밥그릇' 늘리기로 여겨지며 부정적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수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구축소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이다. 비용증가에 대한 반감, 국회와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이 종합된 결과다. 정치권은 의원정수확대 실익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 뜻을 살피는 게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라.

### 눈앞에 닥친 '반도체코리아' 위기... 특정제품 편중 '업보'

한국경제연구원 이 28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에 따르면 11월 전망치가 지난달(9.7)보다 하락한 9.7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자 및 통신장비(77.3)는 중국이 7%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며 바오치(保七)시대를 마감한 2016년 2월(76.0)이래 4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코리아 연합군'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저조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경쟁업체인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은 사상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신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텔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삼성전자에 빼겼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올해 탈환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같은 결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실적 '신기원'을 이뤄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메모리편중' 부작용 우려가 현실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 관련 투자보고서를 낸 국

내 10개 증권사의 반도체 실적전망치는 매출 16조6,270억 원과 영업이익의 3조3,400억 원이다. 전망치대로라면 영업이익이익률은 20.1%로, 지난 2014년 2분기(19.0%)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셈이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조8,388억 원과 4,726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익률이 6.9%에 그쳤다.

이처럼 지난해까지 '승승장구'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급전직하한 것은 '메모리편중'에 따른 업보라는 분석이다. 인텔과 TSMC 등이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덕분에 특정제품 가격급락에 따른 충격을 상쇄한 게 이를 반증한다.

전문가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제품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또한 중장기전략을 위한 공조에 나서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b>아시아타임즈</b> www.asiatime.co.kr 대표 전화 (02) 801-1800 팩스 (02) 801-1819			
발행·대표이사 조 용 하	사장 겸 편집국장 임 춘 성	주필 강 현 직	인쇄인 이 정 자
2013년 7월 1일 창간 2013년 1월 10일 등록번호 서울 가 0992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광 고 국 (02) 801-1814	사 회 부 (02) 801-1861	생 활 경 제 부 (02) 801-1863	
편 집 국 (02) 801-1850	산 업 부 (02) 801-1855	문 화 부 (02) 801-1861	
팩 스 (02) 801-1859	금 융 중 권 부 (02) 801-1823	편 집 부 (02) 801-1851	
정 치 경 제 부 (02) 801-1823	건설부동산부 (02) 801-1852	전 국 부 (02) 801-1822	
운 전 부 (02) 3666-0041-3 (외주 인쇄 가능)			
(우)100-01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1길 27 프리엠빌딩 8층 구독료 월 15,000원 부 800원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인제약(주)**

2019 브랜드 고객충성도  
**변비약 부문 1위**  
주최·주관 : 한국소비자포럼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없이 유래, 상쾌, 통쾌하게 사는 비결... 아세요?  
메이킨은 변비에 좋은 생약과 양약성분이 밤사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을 한 번에 싹~ 해결해 드립니다.

광고심의필:2019-1480-004104 \*인쇄 및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복용 시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제품문의 (수신자 부담) 080-587-7575